

'김정은 방중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가속도'

문 대통령, 제2차 북미회담 결과 지켜보는 신중함 속 중재역할 뛰어들 듯 "北 과감한 비핵화 촉진·독려 위한 美 상응조치들 함께 강구돼야" 내다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시작으로 급속한 한반도 정세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북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에 끝이 다스 정제됐던 비핵화 협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북중→북미→남북 정상회담 순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시간표에 가다가 잡혀 가고 있다.

한반도 중재역할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곧 있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는 신중함 속에서도 적당한 타이밍에 본격적인 중재 역할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전개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머지 않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고위급의 협상 소식을 듣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 이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질 후속 정상회담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졌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문 대통령과의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한 달 전인 3월25~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인 5월7~8일 중국 다롄에서 2차 북중 정상회담을 했고, 북미 정상회담 일주일 후인 6월19~20일 3차 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를 진해 중에 있다"고 밝히며 두 정상 간의 두 번째 만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통상의 정상회담 프로토콜에 비춰볼 때 시기·장소를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북미 간에 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제재 완화 등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북한과, 북한의 핵시설 신고·검증 과정이 우선 돼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 우선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독려하기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그 점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에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이후 전개될 여러 정상외교를 통한 중재 역할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ICBM 등 미사일 생산라인 폐기,

영변을 제외한 다른 핵시설 단지의 폐기 등을 구체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의 예로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할지 마주 앉아서 담판을 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속에는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비핵화 타임라인 도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대감이 녹아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따라 대북 제재 당국이 정제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핵시설 신고·사찰·검증을 수용하고, 미국은 그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하는 상응조치를 주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북미 정상이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면 문 대통령의 운신의 폭도 한층 넓어진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를 언급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안의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목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던 종전선언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정전협정 체결국(북한·미국·중국)과 6·25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끄는 것이 문 대통령이 그리는 시나리오다.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북

미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 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기대 이하로 끝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연쇄적으로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핵화의 길을 반대하는 북한 내 군부세력의 저항이 더욱 심해지고, 서울 답방에 대한 만류 목소리도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목표했던 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된 것도 내부 저항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답방 발발은 내부 사정 때문으로 알고 있다. 내부 참모들 쪽에서 반발이 상당한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를 설득하는 게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

천정배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 추진할 것"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은 "언론을 떠난 지 3년간 청와대를 가지 못하게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 법을 조속히 만들어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 비서관의 청와대행에 대해 "권력을 감시할 위치에 있는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다. 언론 윤리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허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



다. 천 의원은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비판하던 일이 생생한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정부는 권언유착이 아니라고 말씀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인사가 적어도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인사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권언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MBC 노조와 한겨레 신문 노조가 비판한 것은 그래도 건강한 언론인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언론인의 청와대행을 3년간 금지할 이유에 대해 "현행 공명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의 경우 탈당 후 3년 동안 공명방송 이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와의 균형을 생각할 때 거꾸로 언론인도 청와대로 갈 경우 3년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신년 간담회 성료

심재철 의원·당협위원장 등 참석 토론 진행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도당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도당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 정부의 정치 경제 국방 분야 등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며, 앞으로 당이 나아가야 할 부분을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으로 인해 더 힘든 한해를 보냈다"며, "소득은 성장에서 생기는 결과물인데, 어떻게 소득을 주도해 성장을 이루겠다는가"라며 말과 마차가 바뀐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김진성 기자

안호영 "올해 장수지역 현안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도당 위원장)이 장수지역 기자 및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올해 전북발전 및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토대를 닦고, 계보·장계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장수현안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장수군 출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2019년도 국가예산이 전북 전체적으로 7조3289억원을 확보, 사상 처음으로 7조원대를 돌파했다"며 "장수군 또한, 신규 39건, 계속 40건 등에서의 국가예산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24.8억원도 확보해 장수 현안 추진과 지역현안 해결이 가속도를 붙이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올해 의정계획에 대해 "제21대 총선을 앞둔 올해는 무척 중

요한 시기인 만큼, 초선의원으로서 재선거만 마련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상임위(국토교통위)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정책대안은 물론,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군산 등 지역경제 회생 등 전북현안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총 80억원 규모의 계보·장계면 기초생활거점사업과 함께, 금덕면 농촌마을 복원(호덕 등), 마을민들기(송하골, 구암 등) 추진에 팔을 걷어부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도13호 장수유교~전천 남양삼거리 2차로 확장 등 주요 도로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5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민주당 도당 위원장으로서 지역과 중앙과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고, 총선공약 이행 및 지역현안과 연계된 의정활동 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완성품의 '점점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도의회 오늘 새해 첫 임시회

전북도의회는(의장 송성환) 14일 2019년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하진 도지사과 김승환 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새해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인 이한기 의원(진안)이 대연설 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 등 총 13건(조례안 11, 결의안 1, 동의안 1)의 의안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김대오(익산)·김명지(전주8)·박용근(장수)·황의탁(무주)·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조동용(군산3)·김종식(군산2)·한원수(임실)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35회 임시회는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한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